

2024 경제정책방향

THE ECONOMIC
POLICY DIRECTIONS

활력있는
민생경제

CONTENTS

Part1. **민생경제 회복**

1	물가·서민생활 안정	05
2	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	07
3	내수·수출 회복 가속화	08
4	지역경제·건설투자 활성화	12

Part2. **잠재위험 관리**

1	부동산 PF 연착륙	14
2	가계부채 체계적 관리	15
3	공급망 안정 확보	15
4	금융 안정·건전성 제고	16

Part3. **역동경제 구현**

1	혁신 생태계 강화	17
2	공정한 기회 보장	19
3	사회 이동성 제고	20

Part4. **미래세대 동행**

1	재정 지속가능성 확보	21
2	인구·기후 위기 대응	21
3	미래세대 기회 확대	24

2024년 경제정책방향

경제운용 4대 기조

자유

공정

혁신

연대

활력 있는 민생경제

민생경제 회복

- 물가·서민생활 안정
- 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
- 내수·수출 회복 가속화
- 지역경제·건설투자 활성화

잠재위험 관리

- 부동산 PF 연착륙
-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
- 공급망 안정 확보
- 금융 안정·건전성 제고

역동경제 구현

- 혁신 생태계 강화
- 공정한 기회 보장
- 사회 이동성 제고

미래세대 동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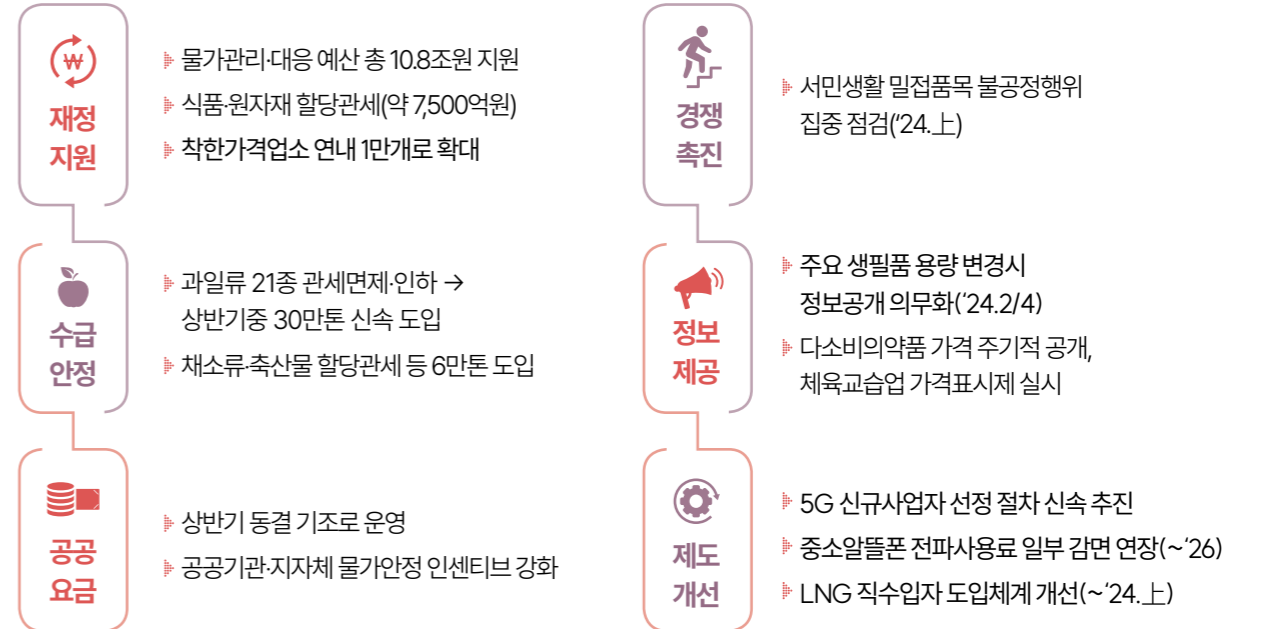
-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
- 인구·기후 위기 대응
- 미래세대 기회 확대

01 물가·서민생활 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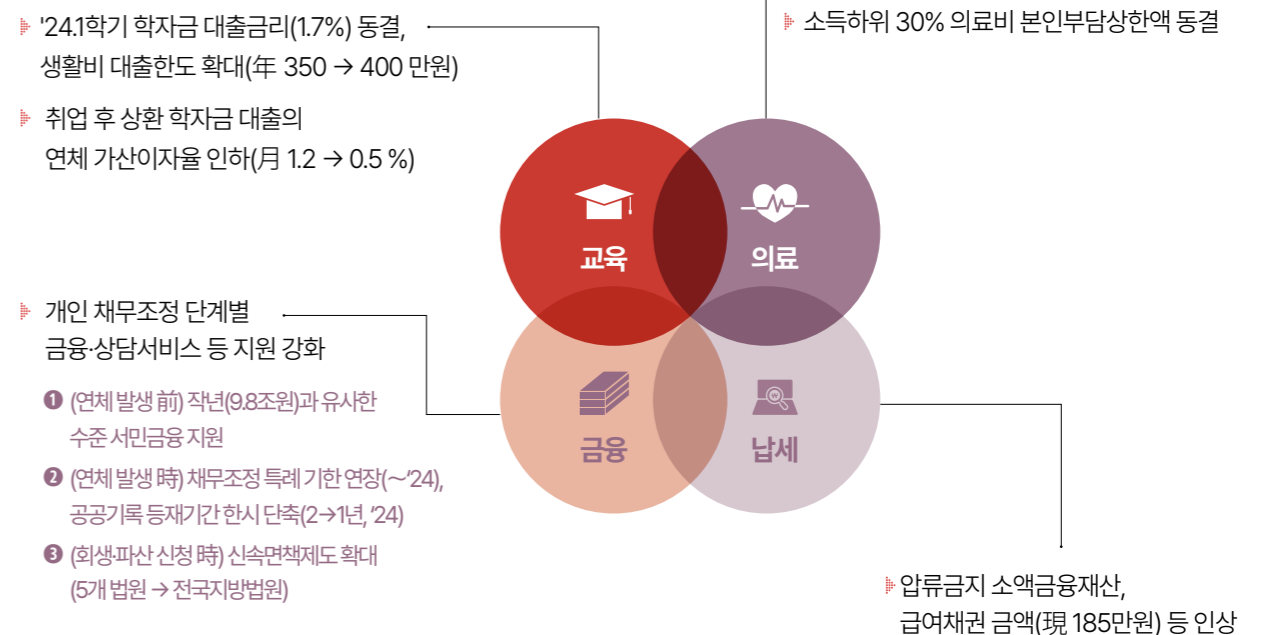
Part. 1 | 민생경제 회복

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면서, 핵심 생계비 경감, 주거안정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 완화

I 상반기중 2%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



II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강화



역전세·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·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

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

다세대·다가구 지원

- ▶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'다세대·다가구 지원 3종세트' 시행
 - ①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·저가주택(APT 제외) 매입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(최대 200만원) 및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
 - ②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등에 소형·저가주택(APT 제외) 양도 허용('24년 한시)
 - ③ '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·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

공공임대 지원

- ▶ 공공임대 11.5만호 이상 공급
- ▶ '24년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, 지역주택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로 임대료 동결 유도

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

- ▶ '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' 참여 금융기관을 소금융권으로 확대
- ▶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한 HUG 확인절차 보강

서민·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

주택유형 다양화

- ▶ 청년·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주택에 대한 분양가·임대료 인하 유도
 -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(10%) 면제로 임대료 부담 완화
 - 지분적립형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~10% 인하
 - 공유형 주택 도심에 청년특화 공공임대 공급

전세대출

- ▶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·한도 확대
- ▶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(버팀목대출)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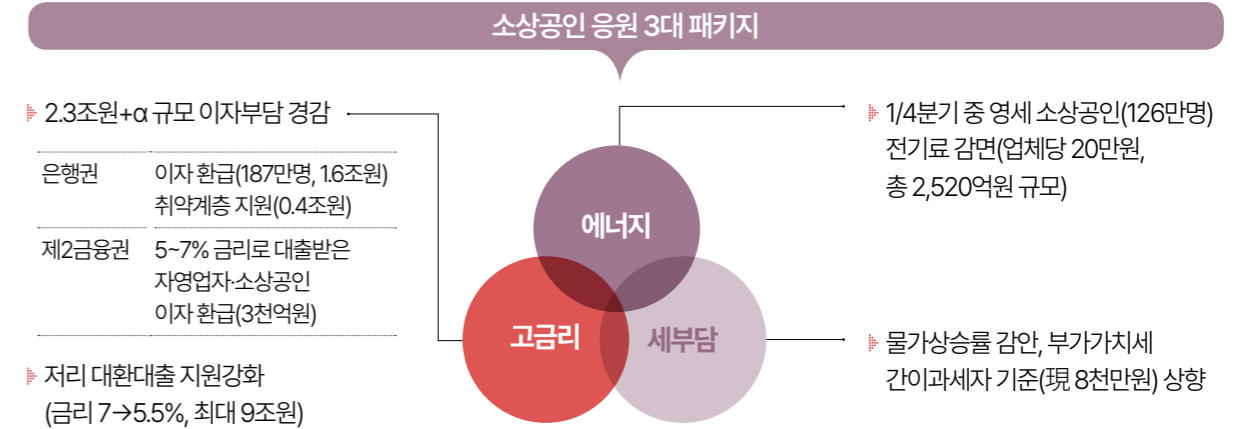
정책모기지

- ▶ 디딤돌대출·보금자리론 예년 수준 공급으로 장기·저리 주담대 집중 지원
- ▶ 보급자리론 지속 공급으로 실수요층 주택 구입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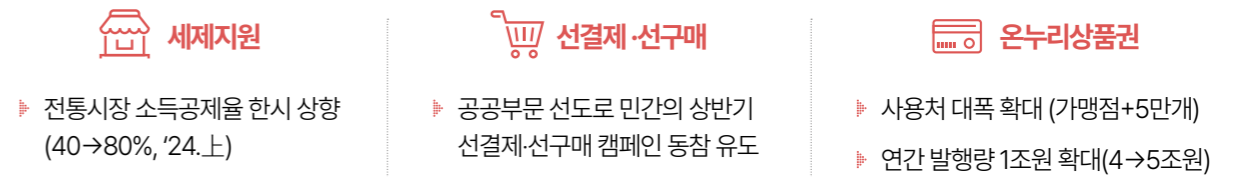
02 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

고물가·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,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

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과 함께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



전통시장 등 매출확대 지원



재기지원 및 근본적 경쟁력 제고



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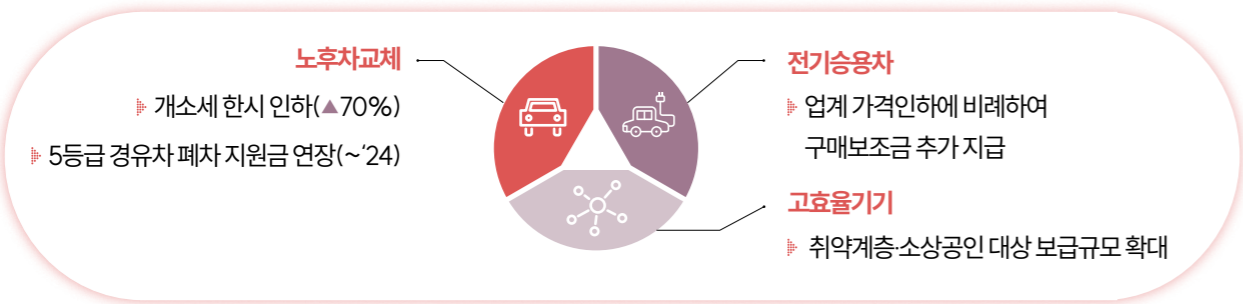


03 내수·수출 회복 가속화

소비·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, 수출 개선 흐름 가속화 및 민간투자 조기 반등 총력 지원

I 세제·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 지원

- '24년 카드사용액 등이 전년 대비 5% 이상 증가시, 증가분에 대해 10% 추가 소득공제 도입(별도한도 100만원)
상반기 카드사용액 등 증가분에 대해서는 20% 소득공제 적용
- 노후차교체·고효율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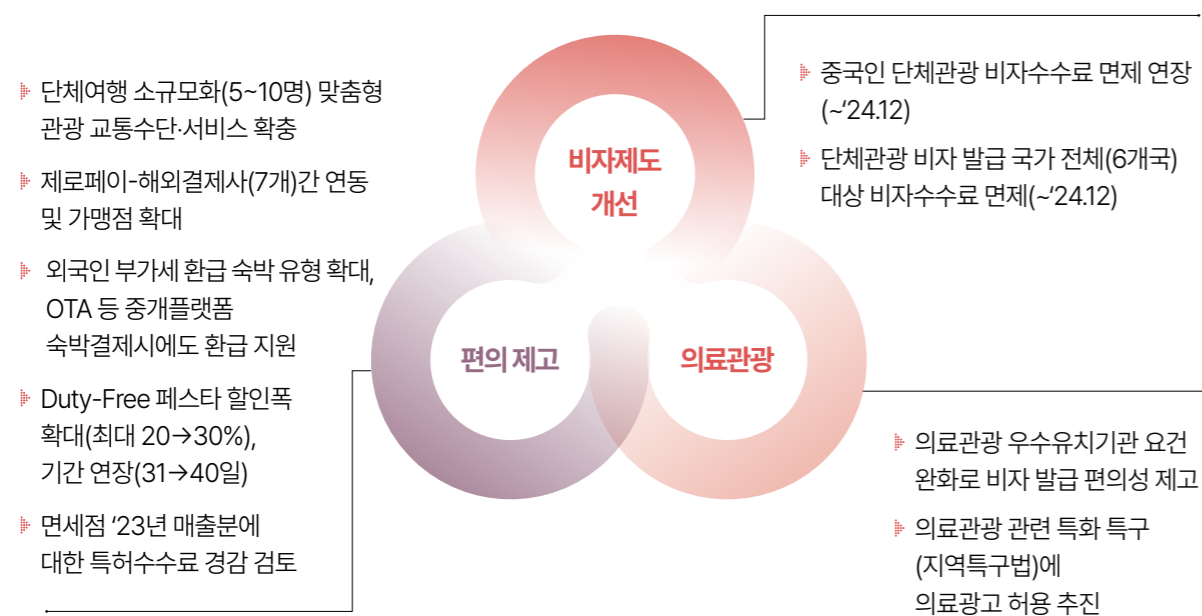


I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·외국인 정책지원 강화

내국인 관광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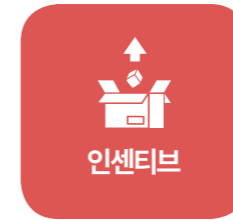
- 여행가는 달 연 2회 (2·6월) 확대 시행
- 지역축제 조기 개최
- 숙박쿠폰·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대폭 확대
-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영업 전환 유도
- 농어촌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

방한관광객 유입 촉진 : 2천만명 달성 목표



I '24년 수출 7천억불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

연간 수출 7천억불 조기 달성 지원



- 무역금융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
-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,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연장(~'24)
-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투입, 해외거점 항만내 물류센터 확충
- 상반기 중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2/3 수준 집중 투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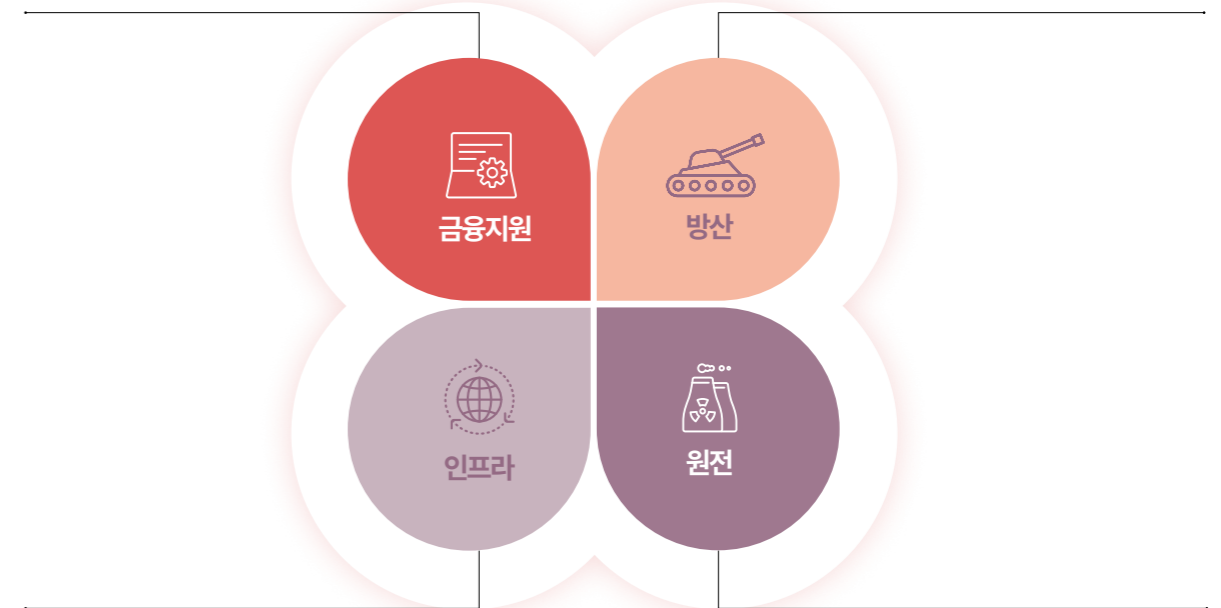
-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·부가세·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1년 연장(~'24)
-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
- '찾아가는 수출지원 프로그램 설명회·신설·운영(분기별 1회)



- 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 강화
-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 보강(11.8→12.2조원)
- 농식품 수출 전문조직 육성 및 특화 물류체계 구축
- 중남미 수출기업 쇼케이스, 한·중남미 무역 포럼 추진

인프라·방산·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지원

-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이후 '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' 신설 검토
- 대형수주 프로젝트에 민간금융 참여 적극 유도
- 방산기술을 신성장·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수주 확대 뒷받침
- 권역별 거점국 설정 및 진출전략 차별화



- '27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외건설 400억불 수주를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
- 제2 중동분 확산을 위한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
- 유망 수주국 대상 전략적 협력채널 강화
- 설비·운영·정비 등 원천산업 전주기 수출 위한 新프로젝트 발굴

경제외교·통상협력 강화

- ▶ 범부처 '글로벌 파트너십 실행·점검단' 신설·운영
- ▶ 순방성과가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뒷받침



경제외교



ODA

통상협력



- ▶ 몽골·조지아·탄자니아·세르비아 등과 경제동반자협정(EPA) 추진
- ▶ 新통상환경 맞춰 既체결 FTA 업그레이드 추진



- ▶ IPEF 논의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산업·투자 확대
- ▶ 개도국 조달시장 등 신시장 발굴·선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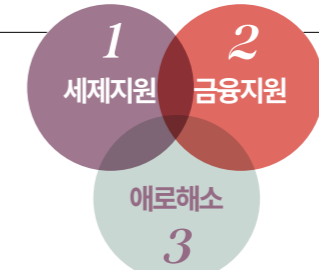


- ▶ EDCF 지원규모 역대 최대폭 확대(+34.8%)
- ▶ 고위급 교류 성과 창출 사전준비 철저
- ▶ KSP·EIPP 사업 선정시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 선정

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·금융·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

시설·R&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

- ▶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(~'24.12)
- ▶ R&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한시 상향 (기업규모별 투자증가분 공제율 각 +10%p 상향, ~'24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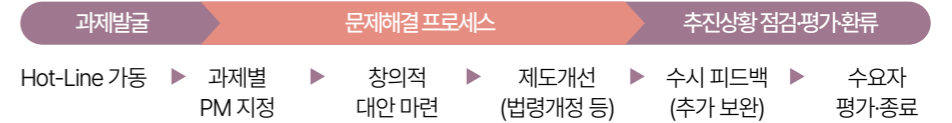


역대 최대인 52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

- ▶ 기은(23조원)·산은(22조원)·신보(4조원)·중진공(2조원) 공급
- ▶ 최대 1.3%p 우대금리 지원
- ▶ 반도체·이차전지·미래차·로봇 등 첨단분야, 공급망분야, 그린분야 등 특별지원

지체된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속 발굴, 신속 가동 지원

▶ 경제단체·협회,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애로 해결하는 '투자 익스프레스'를 신설('24.1)하여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('24.3)



역대 최대 외투 유치(350억불) 및 유턴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

350억불 외국인투자 유치



- ▶ 100대 핵심기업 선정·발굴 등을 통한 전략적 유치 노력 강화
- ▶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이행 밀착 지원
- ▶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적극 개선



- ▶ 외투 현금지원 예산 4배 확대 (500→2,000억원)
- ▶ 국가·첨단전략기술 중심 현금지원 비율 상향
- ▶ 외투기업 현금보조금의 국가분담비율 상향
- ▶ 수은의 유턴·외투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우대 지원

유턴 활성화



- ▶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 대폭 확대 (570→1,000억원)
- ▶ 국가·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 지원한도 상향 (수도권 150→200, 비수도권 300→400억원)



- ▶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 요건 폐지

04 지역경제·건설투자 활성화

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, 건설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

I [거점지역] 일자리·교육·도시융합·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

초광역권 특화발전 ▶ '24년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 수립('24.3)

권역별 거점 육성	특구	내용
	기회발전특구	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('24.上), 입지보조금 지원비율 5%p 상향
	교육발전특구	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·운영('24~)
	도심융합특구	5대 광역시 선도사업 추진('24.下)
	문화특구	1년간 예비사업 추진·심사 거쳐 최종 지정('24.末)
	글로벌 혁신 특구	지역 기반 디테크 유니콘기업 육성 위해 3곳 추가 지정(現 4곳)

특구 효율화 ▶ '특구제도 합리화 방안' 마련('24.下)

I [인구감소지역] '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' 추진

1 생활인구 확대: 세컨드 홈 활성화

- ▶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→ 주택보유·거래 인센티브 확대
- 재산세·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- 양도세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
2 방문인구 확대: 관광인프라 조성

- 관광기반 확충**
 - ▶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권한 이양(시·도지사→시장·군수)
 - ▶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 범부처 지원협의체 운영
- 금융**
 - ▶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사업체 융자조건 우대
 - ▶ 관광기금 융자의 지방 우선배정 추진 (60% 이상 목표)

3 정주인구 확대: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·어촌 활력 증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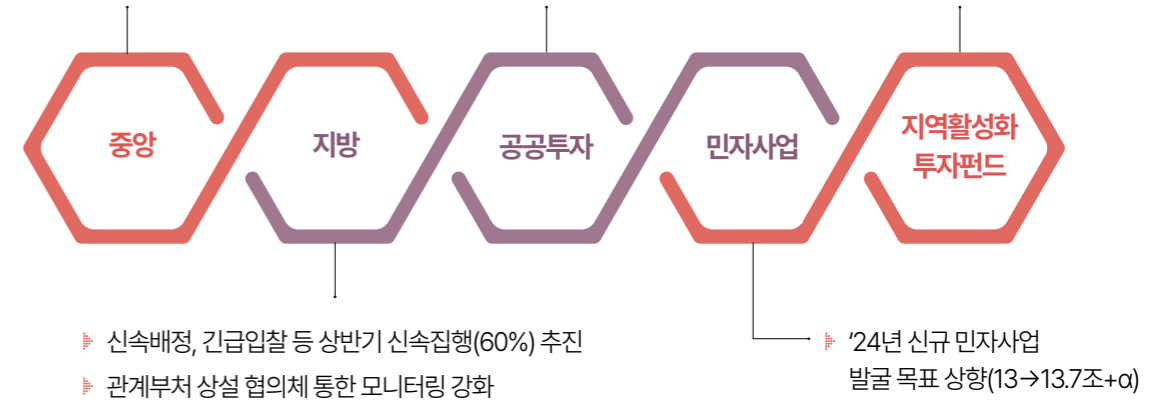
- | 외국인 | 농어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▶ 지역특화형 비자(F-2-R)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 추진 | ▶ 농촌소멸 대응방안 마련('24.上) |
| | ▶ 수산업·어촌 활력 제고방안 마련('24.上) |
- 의료**
- ▶ 의대 입학정원 확대 연계, 지역·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 촉진하는 정책패키지 마련('24.上)



I [건설투자]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

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

- ▶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(65%)
- ▶ '24년 60조원대 규모
- ▶ 시장성·지속가능성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추진
- ▶ 국가계약 한시특례 연장 등으로 신속집행 지원
- ▶ 상반기 역대 최고 집행률(55%) 목표



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 개선

한시적 규제유예

- ▶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%, 학교용지부담금 50% '24년 한시 감면
- ▶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1년 유예('24→'25년)
- ▶ 전 분야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발굴 및 순차적 추진(국조실, '24.上)

권한이양

- ▶ 제1차 이양 과제 신속 추진·완료(~'24.上)
- ▶ 제2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추가 발굴

부담완화

- ▶ 건설사 유동성 부담 완화
- ▶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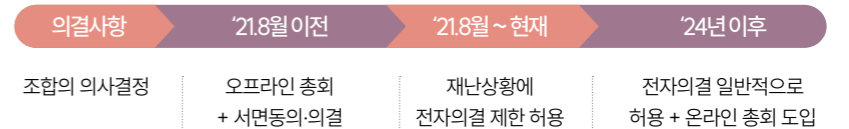
주택 공급 활성화



- ▶ 수도권 등 신규택지 발굴 추진 및 택지 사업기간 단축
- ▶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로 주요 3기 신도시 '24년 부지조성 및 조기 착공 추진
- ▶ 뉴·홈은 '24년중 9만호 이상 공급, 사전청약 1만호 실시
- ▶ 주택공급 종합대책 마련('24.1)



- ▶ 주택공급 인·허가 통합심의 의무화
- ▶ 정비사업 관련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의결 도입으로 사업기간 단축



- ▶ 공사비 갈등발생시 분쟁조정제도 적용 활성화
- ▶ 건설업종 외국인력 채용쿼터 확대('23, 3,220명 → '24, 6,000명)

01 부동산 PF 연착륙

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,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



건설사·PF사업장에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

- ▶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조속 집행
- ▶ 대주단협약 통해 시공사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
- ▶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(6조원), 비주택 PF 보증 신설(4조원), 특별용자(0.4조원) 등 건설공제조합 통한 유동성 지원 강화



사업장별 애로요인 점검 및 부실우려·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

- ▶ 정상사업장 적시 유동성 공급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 유도
- ▶ 일시적 유동성 위기 사업장에 대한 LH 매입 후 정상화 방안 검토
- ▶ 'PF 정상화펀드' 내 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(~'25년) 취득세 50% 감면



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 추진



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후속조치 신속 추진('24.上)

과제명	개정안 주요 내용	후속조치·이행시기
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초환 분담비율(10~70%) 구간 확대 ▶ 장기 거주자 부담금 특례 도입 	▶ '24.3월 시행 예정 (장기거주 특례 세부사항 마련 등)
노후 계획도시 특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노후계획도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	▶ '24.4월 시행 예정

▶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배제(~'24.5) 1년 한시 연장

02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

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설정하에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, 고정금리 비율 확대 등 질적 개선 노력 병행



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, '27년까지 GDP 대비 100% 이내로 관리

- ▶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등 관리 강화
- ▶ DSR 적용 예외항목 점검 등 중장기적 DSR 적용범위 확대 검토



'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0% 수준으로 상향 관리

- ▶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인센티브 강화
- ▶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
- ▶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('24)

03 공급망 안정 확보

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 완비하는 한편, 공급망 다변화·에너지 안보 등 근본적 대응 강화



공급망위원회 신설, 신속대응반 운영, 기금 신설

- ▶ 조기경보시스템(4천여개 품목) 가동,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
- ▶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 조성으로 핵심소재·부품 기술자립 등 추진
- ※ 「공급망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」 수립('24.上)



금융·세제·재정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강화

- ▶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 확대(수은, 20→22조원)
- ▶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 연장(무보, ~'24)
- ▶ 해외자원개발 실패시 용자금 감면비율 상향(70→80%)



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비축방식 다양화

- ▶ 정유사 유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비축비중 조정
- ▶ 국제 공동비축사업 통해 비축비용 경감
- ▶ 우선사용권·비용지원 등 비축업체 인센티브 확대

04 금융 안정·건전성 제고

Part. 2 | 잠재위험 관리

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·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, 금융기관·한계기업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노력 강화

부문별 수급여건 개선 등 금융·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

자금채권시장

- ▶ 금융기관 규제 완화조치 연장(~'24.上)
- ▶ 채권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물 발행물량·시기 조절
- ▶ 국제통합계좌 개통('24.6)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 지속 추진
- ▶ P-CBO 신규공급 확대(2.8→3.2조원)
- ▶ 퇴직연금 만기분산 유도 및 예보료율 한도(0.5%) 일몰(~'24.8) 연장

주식·외환시장

- 공매도 개선** ▶ 불법공매도 방지 위한 전산화 추진 등 공매도 제도 근본적 개선
- 외환시장 구조개선** ▶ 외국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('24.1~ 시범운영)
- ▶ 개장시간을 익일 02시까지 우선 연장(1월 시범운영, 7월 시행)
- ▶ 外人 투자자 원화환전 편의 제고(외국환거래규정 정비)

시중은행·상호금융·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

은행

- ▶ 경기대응완충자본(CCyB) 적립('24.5~ , 1%)
- ▶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

상호금융

- ▶ 부동산·건설업 여신한도 규제 시행('24.下)
- ▶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

저축은행

- ▶ 소상공인·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 확대

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

부실방지

- ▶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 위험평가 강화
- ▶ 유동성 애로 중소기업 대상 신속 금융지원 강화(신용보증지원한도 10→15억원)

사업재편

- ▶ 기업활력법상 상생형 사업재편 인센티브 도입
- ▶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도개선
- ▶ '기업구조혁신펀드'('24 조성, 1조원) 투자 개시

회생지원

- ▶ 중소기업·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신속화
- ▶ 회생신청 기업 낙인효과 등 장애요인 개선 추진

※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①혁신 생태계 강화, ②공정한 기회 보장, ③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중점 추진
→ 금년 상반기 중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,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 연속 발표

01 혁신 생태계 강화

Part. 3 | 역동경제 구현

규제혁신, 과학기술·첨단산업 육성,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

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

입지규제

▶ 3대 입지규제 개선

① 개발제한 구역	지역내개발제한구역해제사업 추진시 요건 완화
② 농지	소멸 고위험 지역에 (가)해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
③ 산지	생태적 가치 높은 산지 보전 및 국민편익·기업활동 필요 산지 이용 확대

킬러규제

▶ '킬러규제해파 TF'로 10대 분야 킬러규제 발굴개선

규제 샌드박스

▶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('24.1/4)

첨단산업 클러스터, High5+ 등 중심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

클러스터 신속 조성

- ▶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
- 1단계** 산단계획 수립前 | 사업타당성조사, 예비타당성조사 등
- 2단계** 산단계획 수립·승인 | 환경영향평가 등
- 3단계** 부지 확보·착공 | 토지 수용 협의, 인허가 등
- 4단계** 기업 입주 | 정주 여건 조성 등

- ▶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 차등화,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, 지원비율 상향 검토
- ▶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 적기 공급방안 마련

High5+ 중점 육성

- ▶ 반도체(디스플레이 포함), 이차전지, 바이오, 미래 모빌리티, 수소 등 맞춤형 지원 강화
-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적용 확대
- 향후 3년간 150조원+α 정책금융 공급
- 혁신성장펀드 신산업 집중 투자 및 3조원 추가 조성('24)

신성장 4.0

- ▶ 15대 프로젝트 사업추진 가속화 및 유망사업 육성 기반 확충

신기술 확산	신일상 확산	신시장 육성
·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 사업 착수	·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합동 펀드 조성('24, 200억원 출자)	· K-콘텐츠·미디어 전략 펀드 신규 조성('24, 800억원 출자)
·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등	· 스마트농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등	·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 터미널 개장 등

제도 개선

- ▶ 첨단산업 기술보호 위해 해외인수 합병심사 강화
- ▶ 기술유출 범죄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 상향 조정('24.1/4)
- ▶ 규제환경 평가를 위한 '첨단산업 규제지수' 개발

PART. 3

I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&D 혁신

출연연 혁신

- ▶ 기관간 통합예산('24, 1천억원) 도입·확대
- ▶ 핵심인재 영입 위한 특별채용 도입
- ▶ 전 출연연 통합적 정원 활용



글로벌 R&D 확대

- ▶ 글로벌 R&D 투자 확대(0.5→1.8조원)
- ▶ 연구보안 시스템 구축
- ▶ 해외연구기관의 정부R&D 직접참여 허용
- ▶ 글로벌 R&D 참여 인센티브 제공

민간투자 촉진

- ▶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으로 민간 R&D 참여 촉진
- ▶ 글로벌 R&D 센터 유치 인센티브 확대
- ▶ 연구개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('24.上)

세계 혁신

- ▶ 도전적·혁신적 R&D 예타 패스트트랙·면제 적극 인정
- ▶ 과제당 연구비 적정규모(최소 1억원) 이상 확대
- ▶ R&D 사업 성과평가시 상대평가 전면 도입

I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·창업 생태계 고도화

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

생산성 향상	· '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' 제정('24.上) ·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 수립 · 성장 유망 기업 특례 지원 및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
중소→중견 성장	성장 후 재정·규제·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(3→5년)
글로벌 진출	글로벌비즈니스센터·글로벌파트너링센터 등 확충
지원 효율화	정부지원대상 선정시 민간의 선별역량 적극 활용

벤처·창업 생태계 고도화

로드맵 마련	· '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' 수립('24.7)
투자촉진	· '스타트업 코리아펀드' 조성(~'27, 2조원) · 적기 투자 운용사 인센티브 부여 · 벤처투자조합의 이익 90%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 제외 · 과세이연특례 적용 재투자기간 확대(1→2년)
애로해소	· 재창업자 신용회복 지원 확대 · 창업기업 인정요건 완화
M&A 활성화	· CVC 운용 벤처투자조합 지분을 CVC 기업집단에 매각 허용 ·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(~'23→'26)

I 유망·성장업종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 집중 육성

- 기반조성** ▶ 공공조달 개선방안 마련('24.1/4) ▶ 유망업종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('24. 下)
▶ '(가칭) 서비스 현장점검반'을 운영하여 수요·체감도 높은 과제 지속 발굴

- 산업육성** ▶ 서비스 TF 중심으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마련('24.上)

청년친화	콘텐츠	푸드
· 생활 밀접 및 취·창업 선호도 높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마련	·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('24.1/4)	· K-미식벨트 시범사업 실시 · '향토음식 진흥센터' 설립 추진
MICE	바이오헬스	
· MICE 육성 기본계획 수립('24.上)	· 의료 시 등 융복합 기술 육성전략 수립	

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

02 공정한 기회 보장

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 내 불공정한 관행·제도 혁파

I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

주류 제조·유통 과정의 경쟁제한적 환경 및 주류 산업 규제 개선 추진	운영시간, 최소면적 등 과도한 지역영업규제 완화
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운영, 은행 경영현황 공개 등 금융권 경쟁 촉진	디지털헬스케어,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추진

I 독점적·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·불법 행위 방지

금융	▶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 단계 범정부 대응 강화 · 불법사금융 구속·구형기준 상향 추진 · 범죄정보 공유 확대(금감원·경찰청→국세청)	플랫폼	▶ 플랫폼-입점업체·소비자간 상생협력 적극 지원 ▶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민생피해 방지
		프랜차이즈	▶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에 가맹 필수품목 추가 ▶ 계약조건 변경시 협의 절차 의무화

I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

임금 체계	▶ 이종구조 개선대책 마련('24.上) ▶ 원·하청 상생모델 개발·확산	최저 임금	▶ 최저임금위다양성전문성강화 ▶ 청년 다수 종사업종 최저임금 준수율 집중점검·권리구제 지원
근로 시간	▶ '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' 마련('24.上)	노사 법치	▶ 불법 노조전임자 운영 등 불법·부당행위 근절

I 대·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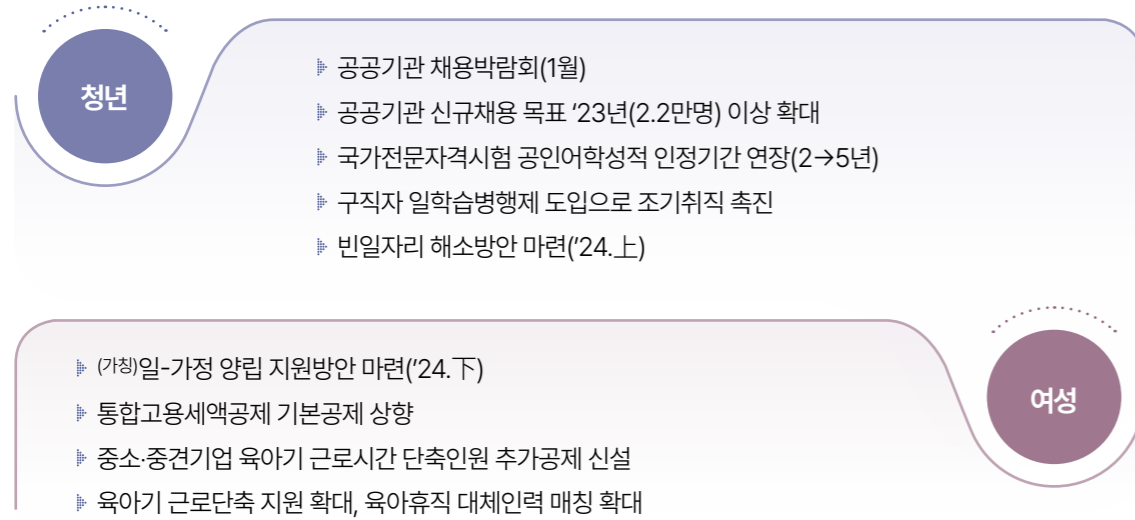
상생협력	▶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한 약정체결 교육·컨설팅 추진 ▶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신설('24.1) ▶ 단품 슬라이딩제도 개선 검토	사회공헌	개인 ▶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(現0.5→2천만원, '25) 추진 공공기관 ▶ '24년도 경영평가시 사회공헌 평가 강화 경제단체 ▶ 사회문제 극복 위한 경제단체의 '공동 프로젝트' 추진
ESG 확산	▶ 글로벌 정합성 고려한 ESG 공시기준 마련('24.1/4 초안 발표)	경제교육	▶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통한 공공·민간 교육자료 연계 제공

03 사회 이동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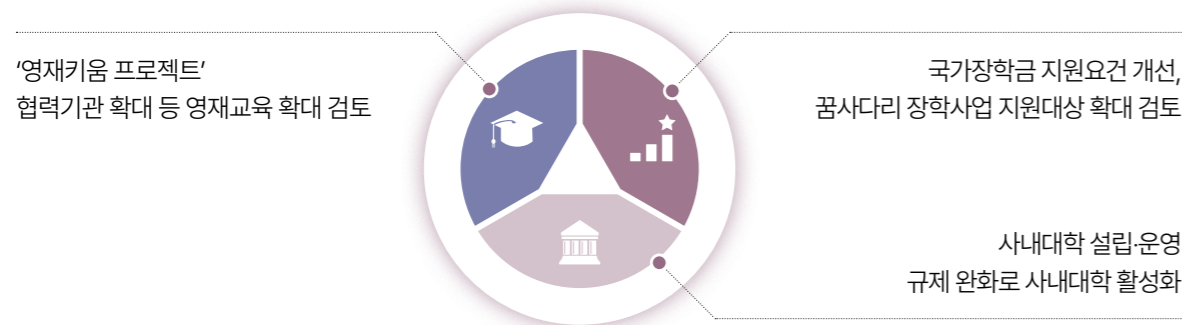
청년·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통해 소득창출 기회를 확대하고, 교육기회 및 약자복지 확충 등 계층간 이동성 강화

* 상반기 중 일자리·교육 등 사회 이동성 강화 방안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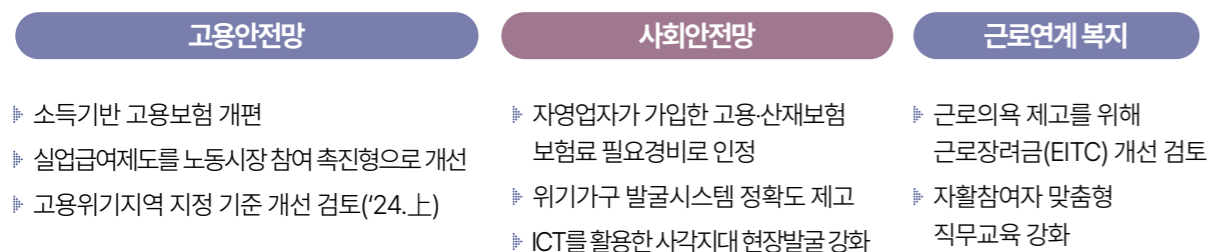
청년·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



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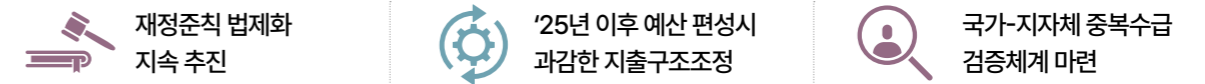
고용·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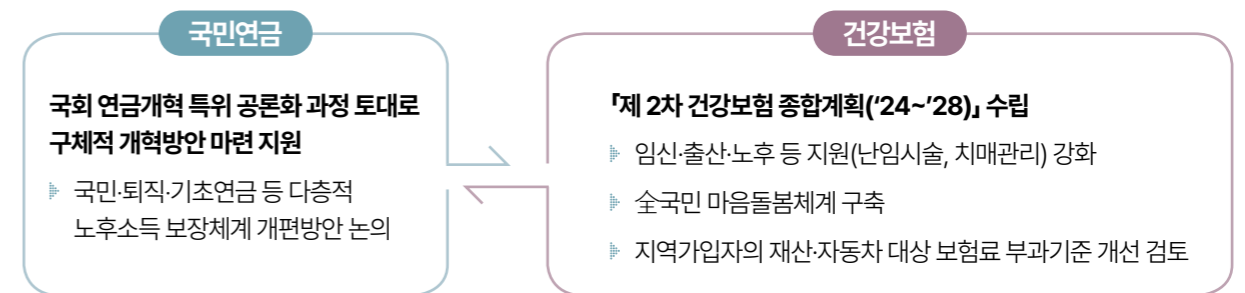
01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

재정준칙 법제화,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

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초 견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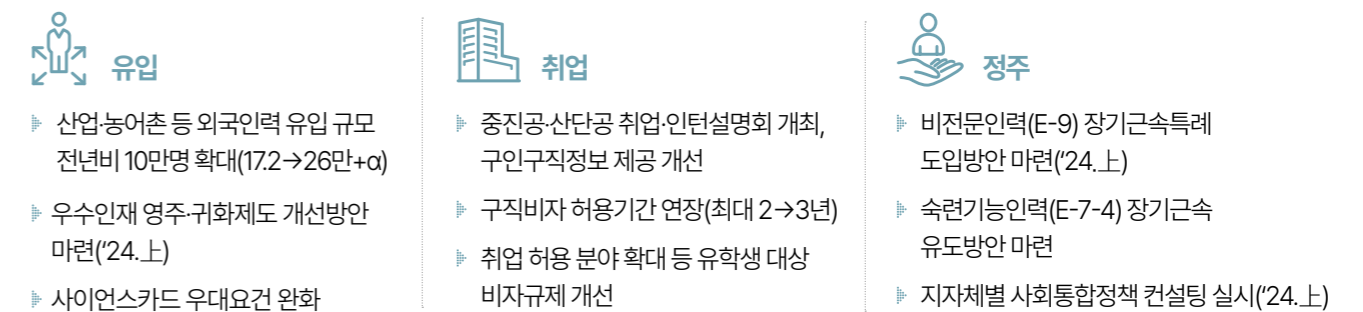
지속가능한 국민연금·건강보험 제도 구축



02 인구·기후 위기 대응

외국인 정책 선진화, 출산·육아지원 확대 등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고, 무탄소에너지 본격 확산 등 탄소중립 목표달성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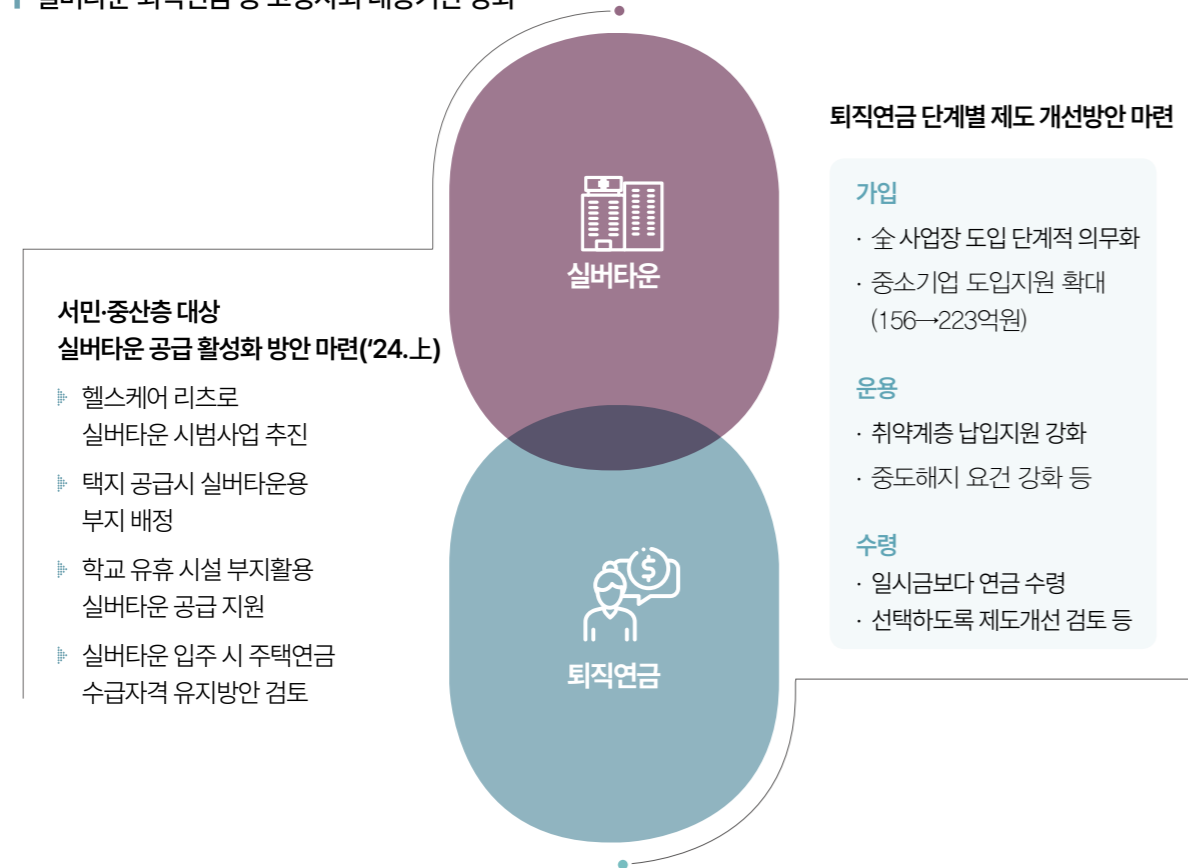
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 전면 개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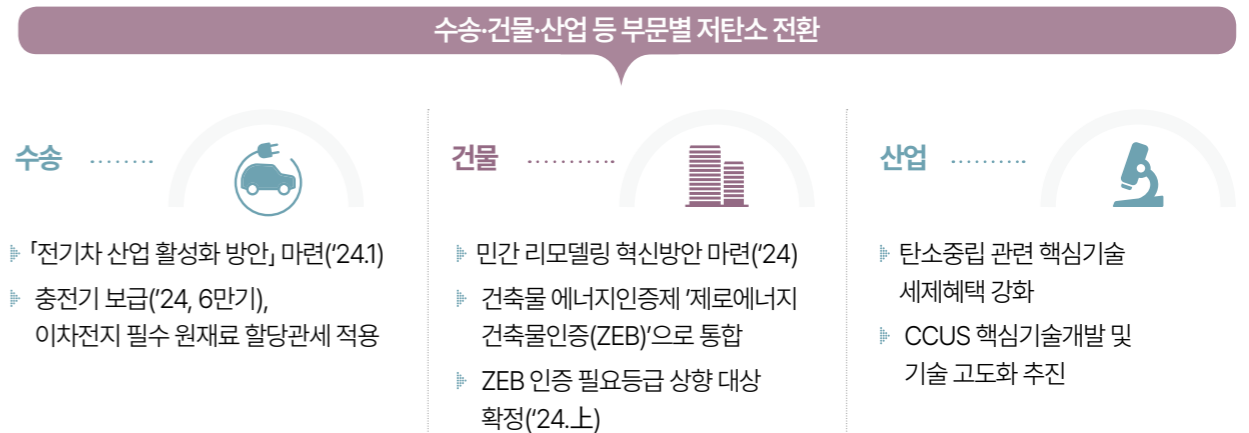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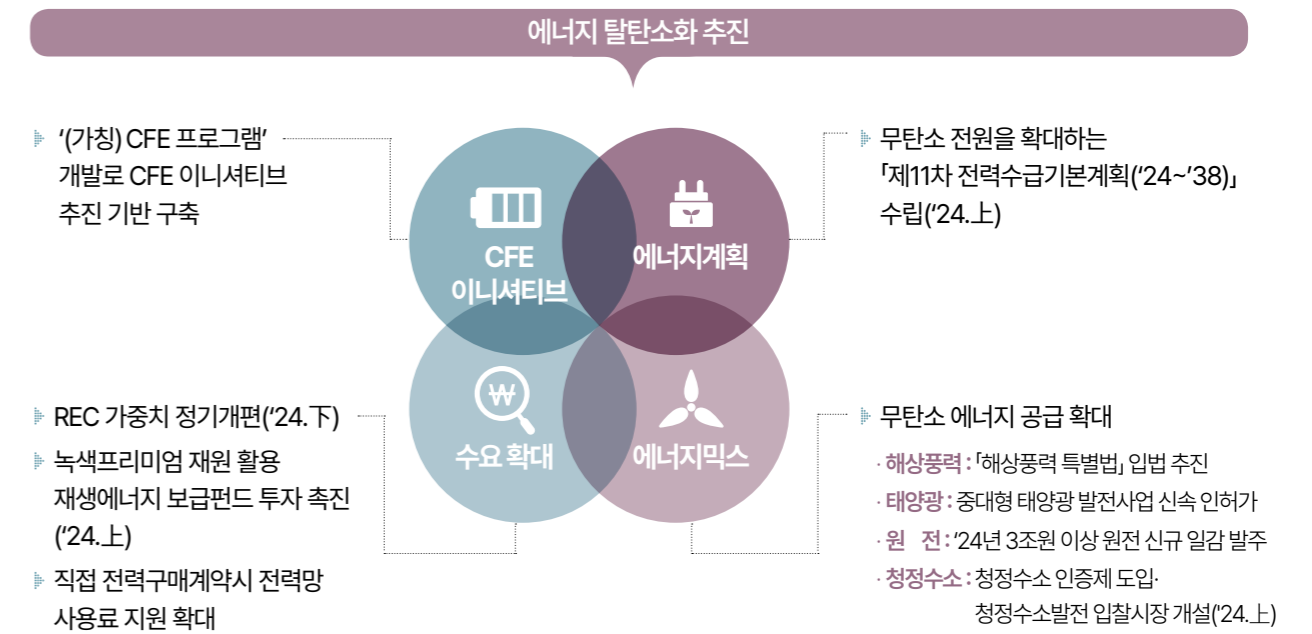
결혼·출산·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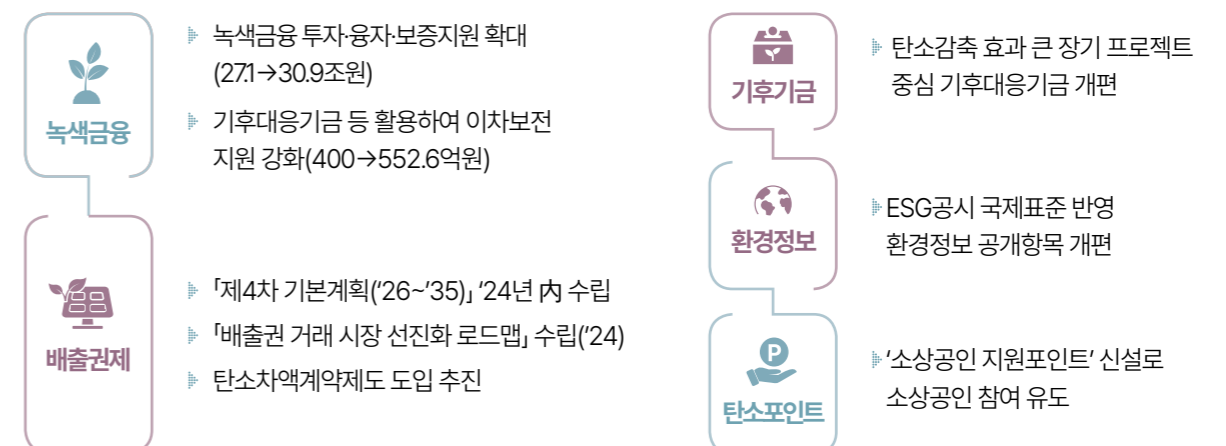
실버타운·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



무탄소에너지 본격 확산,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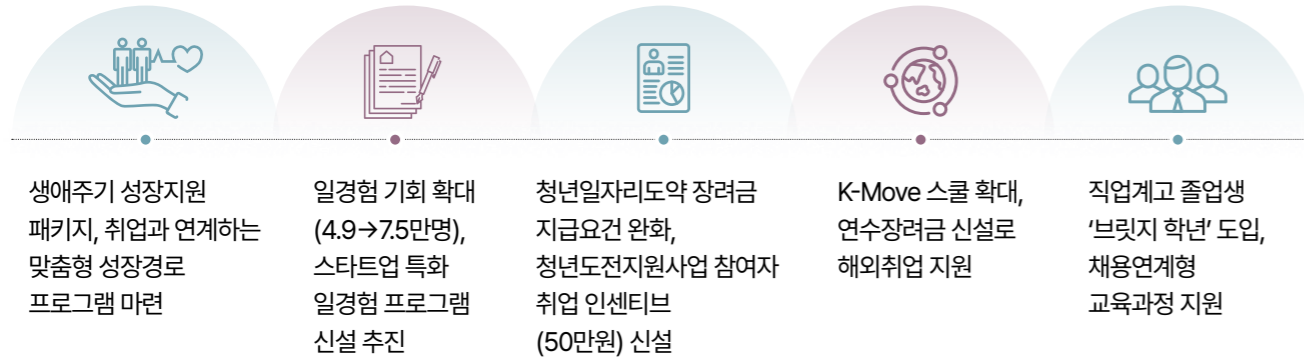


녹색금융·배출권제 등 기후대응 관련 지원 인프라 고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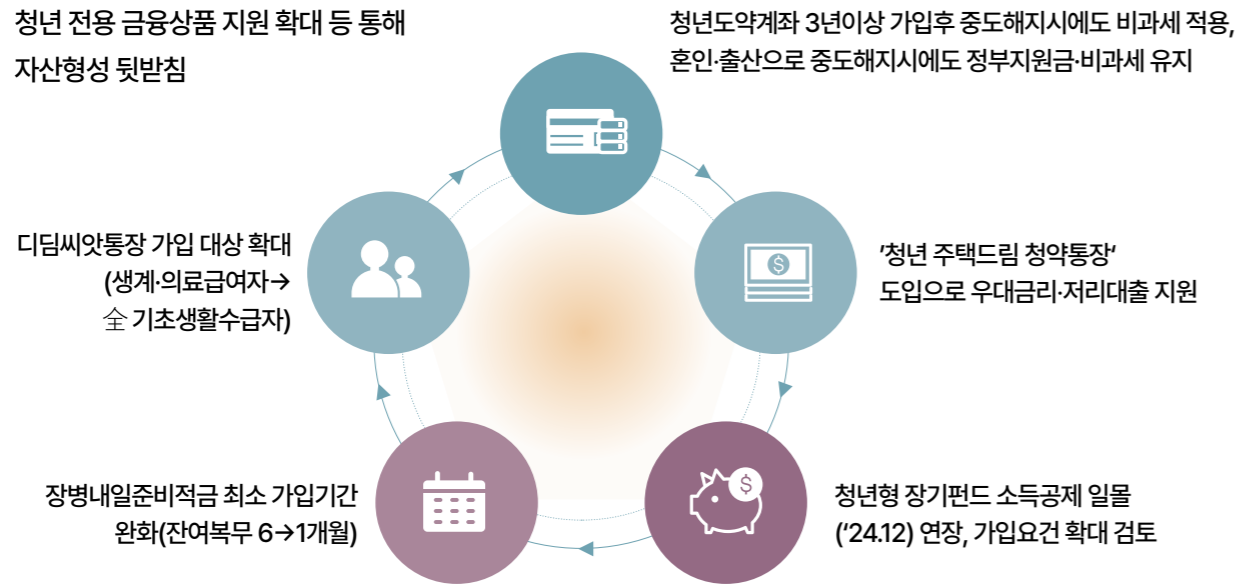


미래세대에 일자리·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간 이동성 제고

청년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



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



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의 자립과 안정 지원 강화

